

지역이기주의 현상의 원인과 극복방안



I. 지역주의 형성과 자기중심주의

하나의 부락이 지리적·경제적 제여건을 고려, 촌락의 형태로 구성되어 발전하여 오면서 지역주의 의식이 점차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하였음을 역사는 말하고 있다. 한지역의 우월감이 타지역의 상대적 낙후성을 비교하면서 그 지역사회의 이해등으로 갈등의 폭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고 地緣·血緣이라는 묵시적 관계로 파벌이 형성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현상들이 개인주의의 모습으로 발전하여 지역구라는 出身成分(?)을 논하는 문을 만들었다. 이러한 근거가 지역이기주의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 NIMBY(not in my backyard)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자주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나의 뒷뜰에는 안된다”라는 이기적 사고가 자기지역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지역주의를 심화시켜 핵



한 천 길 / 인천직할시 복구 의회 의장

폐기물 처리장 건설, 쓰레기 매립장 설치, 화장터 등 혐오시설과 장애자 복지시설 등 환경오염 유발 시설에 대한 강한 반발과 집단행위들은 급격한 산업화 위주의 우리 실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은 인정하면서도 유해시설 설치 예정지구의 지역주민의 반대 목소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명한 필요성이 인지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만은 안된다는 개인적 집단이기주의의 표출은 개인의 이익에만 치우친 개인 이기주의적 성장 心性에서 비롯된 공리주의사상 결핍에서 오는 인간 부재현상으로 보고싶다. 이러한 개인의 손실이 지역을 벗어난 전체의 불이익을 어떻게 소화하고 합리화 시킬 것인가? 문제는 자본주의 속성인 이윤추구가 자본사회 발전의 기본틀이라고 할 때 사유재산의 존립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의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주의적 사고에서 탈피 전체 주민이 이 지역의 환경 유해 시설의 설치를 위해 자기중심적 지역이적 형태를 전체지역의 질서를 위해 희생적 각오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II. 지역주의와 주민의 역할

지역주의의 형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이 중심이 되어 당해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주민의 욕구 충족이라고 볼 때 이는 다분히 고무적이다. 특히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시행은 지역의 특수성과 타지역의 제한적 요소를 보다 창의적이고 실정에 맞도록 설계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데서 더욱 그러하다. 제도적으로 정착된 지방분권화는 주민의 자주성과 협동성이 가미된 책임까지 지역적 특성과 역할을 강조하며 제반 정책을 집행 협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과 집행부간의 상호 의존과 견제가 활성화되고 개성있는 활발한 지역정책을 수행할 능력이 생성되어 주민의 수준높은 깨어있는 의식이 지역 주민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이웃지역과의 마찰과 갈등까지 이해와 선의의 지역경쟁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성숙한 선진 주민의식이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주민의 시대적 사명이며 주민이 최소한 갖추어야 할 역할인 것이다.

한 지역의 개인이 다원화된 현대 산업사회에서 공리적 차원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희

생을 강요당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공리적 차원의 복지시설의 설치가 최상의 합목적과 타당성이 충족되었을때 개인이기주의는 상대적으로 줄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역주민의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다.

III. 기초의회와 지역이기주의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출신 지역의 발전을 위한다는 다변의 목소리가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하나씩 그 힘이 발휘되고 있다. 지역의 활동이 다분히 지역적 편견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체화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간 지역적 이기주의는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내 지역의 공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흔적이 간헐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적어도 이는 지역 편애적 향토애라고 보고 싶다. 즉, 본능적 생활 욕구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그 기저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며, 이것이 타인의 지시나 통제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닌 자연 발생적이라는 사실이 남비증후군과는 구별된다. 이것은 자기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양주와 미금시의 경우에서 이 지역과 서울시의 강북 수원지 건립안을 지난해 7월 11일 남양주군 의회의 덕소취수장 건립 부결안등은 이지역에 취수장이 들어설 경우 상류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각종 재산권 규제가 강화되고, 20년 전부터 그린벨트에 공장이전축진지역으로 묶여있는데 취수장까지 들어서면 집값도 떨어지고 각종 재산권 행사에 더 심한 제약이 온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다. 이에 서울시는 수원지가 들어서면 물 공급 사정이 나쁜 이지역에 하루 9만톤의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 한국일보 발췌.

지역의 특수성과 다수의 행복이 공존하는 공공용의 시설 설치는 좀더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하고 기초의회와 지역주의는 향토애적 공공성으로 참작되어야 하리라 본다.

IV. 지역이기주의의 극복방안

지역이기주의가 지역주민의 원초적인 이기주의



가 아닌 지역을 발전하고 다함께 더불어 사는 전체 지역주의를 실천하고 선의의 지역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지방자치제는 부활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몇가지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전체 국민이 지역이기주의를 탈피, 유해 환경 시설의 설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몇가지 분석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地方議會制의活性化이다. 지방자치제의 발전적 성향이 보다 민주적이고, 지역발전의 경쟁이 토착적인 지역 특성화로 전개되어야 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그 지방의 문화를 건설하고자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장과 반대급부의 이익이 그 지역에 환원되어 재정자립도에 기여하도록 배려도 있어야 한다. 또한 대규모 혐오시설과 공해유발시설의 설치시 선진시설의 설치로 무해한 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하고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사전 검토와 공청회, 타당성등을 주민과 함께 생각하고 지역 의회와 협의의 거친후 상당한 견해의 폭을 좁혀야 한다.

둘째, 지역의 역할과 국가기능의 역할 조정이 있어야 한다. 밀어부치면 된다는 주민의 통제수단은 성숙한 주민의 수준과 지식의 축적으로 주민들은 그의 폐해나 손실산출은 높은 수준임을 알아야 한다. 적어도 국가기능의 역할이 지방분권화 시대의

역할 분담에 맞게 이루어져 양질의 시설이 그 지역을 보호할 수 있다는 선행 조건이 있어야 한다. 지역 주민을 무시한 일방적 공론은 지역 주민의 반발만 거세게 만들 뿐이다.

셋째,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는 사용자의 질높은 식견이 필요하다. 문명과 기계의 발달로 공학적 설계가 아무리 훌륭해도 지역적 특성을 무시한 프로젝트는 지역이기주의라는 정부의 항변을 넘지 못한다.

넷째, 주민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지역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주민의 소리가 보다 높은 차원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확신과 신념의 선행없이는 해당지역에 혐오시설, 핵폐기물 처리장등의 환경유해시설의 설치에 극심한 반대의 벽에 부딪쳐 실효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지역이 이러한 시설이 설치됨으로서 정당함이 입증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자발적인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때라야만이 민주적 지역이기주의로 효용성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제반 여건이 성숙한 사용자와 제공자의 이해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지역경쟁을 통한 정책적 기술(SKILL)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리라 판단된다.